

尹 거부 6개 법안 26일 재표결...국힘 이탈표 '관심'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 등...민주, 부결시 재발의 가능성 국힘, 윤 지지율 하락·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단일대오 흔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국회의원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했다.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이들 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법안 발의'→야당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재발의'라는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둔 상태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통과를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있던 외부 활동에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이 규정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

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 부결을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반대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석 연휴 기간 김 여사에 부정적인 바다 믿음을 확인한 만큼 당론에 맞춰 일제히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여야는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재표결과 별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이 원만히 처리되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본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도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이태희와 김남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검찰 개혁·검사 탄핵' 속도전

편파 수사·기소 공정성 상실...법사위, 오늘 형법 개정안 심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역 2년이 구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외적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 달 2일 법사위가 열 예정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정문회도 검찰 압박과 같은 맥

락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복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정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강박산·엄희준 검사에 대한 정문회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을 향한 반발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형에 우려가 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갑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당 전체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일환으로 보고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당론으로 정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0·16 재보선, 24~28일 거소투표 접수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

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이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사이트나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못 미치는 의대 8곳”

김문수 “취지 이탈, 조치 검토를”

비수도권 의대 26개교 중 8개교는 정부 권고에 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역인재전형은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50.0%에 머물렀으나,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및 내년 2026학년도 입시에서 각각 59.7%와 61.8%로 증가했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주 소재 국립대로 79.1%다. 가장 적은 학교는 강원 소재 사립대로 20.2%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26개교 중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6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8개교나 됐다. 강원 4개교, 부산 2개교, 대전과 제주 각 1개



교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체로 확대하는 가운데, 부산 소재 사립대는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두 68.6%로 축소했다.

강원 소재 사립대 또한 22.8%, 21.2%, 20.2%로 줄었다. 지역인재전형이 가장 적은 곳이기도 하다.

김문수 의원은 "지역의료 강화 취지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지역인재전형을 줄인 곳이 있고 정부 권고보다 적은 곳도 있다. 지역과 상생이라는 취지의 글로컬대학 한 곳은 오히려 지역인재전형이 가장 적다"면서 "취지에서 이탈한 곳은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공사 제2024-68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공급구분	블록명	7/24번	면적(㎡)	공급예정가액(원)	건별률(%)	용적률(%)	최고층수	공급방법
블록형 단독주택	단독25	단독25	19,671.1	11,605,940,000	50	150	3	추첨
		단독26	33,929.9	21,376,830,000	50	150	3	
		단독27	49,459	32,133.5	17,352,090,000	50	150	
준주거	준5	SF6	3,396.5	6,276,695,000	70	350	5	일반경쟁

※ 본 공고의 1순위는 3개 필지 일괄 신청하며, 2순위는 각각 개별 신청하는 공급 공고입니다.
 ※ 선순위 마감 시 후순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신청가능 여부는 선순위 낙찰자 발표 시간 이후 전남개발공사 공사사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분양신청 전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 분양공고에 게시된 필지별 세부내역 토지 현황자료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신청)보증금은 입찰(신청)할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닌)의 5% 이상이며, 입찰 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상기 면적, 견본을 용적률, 층수 등은 공고일 현재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발 및 실시 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기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주거용지는 2024년 5월 유효한 필지입니다.

2. 신청자격

- 블록형 단독주택
- 일반실수요자
- 일정 호수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법, 등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등록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절차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용예대수, 허용가구수 관련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으로 진행되는 용지는 동일인(법인)이 2회이상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시 신청예약금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입찰(신청)신청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개찰	낙찰(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준주거	입찰 24.10.7(월) 10:00 ~ 10.10(목) 16:00	24.10.11(금) 09:00	24.10.11(금) 10:00 이후	24.10.17(목)~18(금) 10:00~17:00 (11:30~12:30 제휴)
블록형 단독주택	추첨 1순위 24.10.7(월) 10:00 ~ 10.8(화) 16:00	24.10.10(목) 09:00	24.10.10(목) 10:00 이후	
	2순위 24.10.10(목) 10:00 ~ 10.14(화) 16:00	24.10.15(화) 09:00	24.10.15(화) 14:00 이후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http://www.onbid.co.kr)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ndc.co.kr	전남개발공사 본청보서처

4. 낙찰(당첨)자 결정방법

가) 추첨 토지

- 공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청자의 신청금액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 다수의 신청으로 경합시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 단독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나) 경쟁입찰 토지

- 개찰은 공고일 개찰일시에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준주거용지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공급예정가격(최저입찰가)이상이므로 기재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 입찰(신청)보증금 납부, 반환 및 취소

가) 납부

- 입찰(신청)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인터넷 입찰(신청)과정 전자서명·온비드 입찰(신청)화면에서 입찰(신청)자에게 부여한 보증금 납부계좌(온비드 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입찰(신청)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하며, 입찰(신청)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시 입찰서 제출과 동등한 환경조건에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환불계좌(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신청)보증금은 온비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잔액을 입찰일 당일 10:00(한국시간)부터 분할납부 가능하여야 하며, 은행공통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신청)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1인(법인)이 경쟁입찰 토지 수개의 필지에 신청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거래은행의 송금시간 기준이 아닌 가상계좌은행에 입금된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송금과 입금시간의 오차를 감안하여 마감시간에 입찰한 송금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반환

- 낙찰(당첨)자의 입찰(신청)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찰자(미당첨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차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반환계좌의 명칭은 반드시 신청인(법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의 명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입찰(신청)보증금 취소

- 낙찰(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신청)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낙찰(당첨)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대금납부조건

① 대금납부방법(유치·분할납부)

용도	계약조건	납부기간	대금 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준주거	1필지	분할납부(2년)	계약체결시 10%	공급금액의 90%(매 6개월 단위 22.5% 균등분할)
				공급금액의 90%(매 6개월 단위 15% 균등분할)
블록형 단독주택	1필지	분할납부(3년)	계약체결시 10%	공급금액의 90%(매 6개월 단위 9% 균등분할)
				공급금액의 90%(매 6개월 단위 9% 균등분할)

※ 필지별 정해진 할부금액은 필지별 계약서 약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에 맞추어 은행계좌로 입금(계약자 명의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공공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 및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부서	문의전화
판매관련 문의	분양보서처	☎ 061-280-0648
지구단위계획 문의	신생장사설처	☎ 061-280-0654
공사계획, 현장감독 등	오룡사업단	☎ 700-5030-5402

2024. 9. 23.
전남개발공사 사장